

2024-08-20

율촌 입법 위클리

Yulchon Weekly Legislation Report

2024-19호 (2024년 8월 20일)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이번 호는 2024년 8월 5일부터 8월 16일까지의 국회 발의 법률안 및 정부부처가 발표한 정책 동향 위주로 구성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8월 13일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급성장하는 생성형 AI 및 클라우드 환경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2013년 도입된 망분리 규제의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9월 중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통해 연내 신규 과제에 대한 혁신 금융서비스를 지정하고, 빠르면 올해 말부터 금융권에서도 생성형 AI 활용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연구·개발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절차와, 新 금융보안체계 구축을 위한 법 체계 개편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지난 주 국회 신규법률안은 최근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유 또는 소화설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안과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통신판매중개자의 정산대금 기일을 정하고, 정산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특히 많았습니다.

그 외 '청소년의 SNS 및 숏폼 중독 예방'과 관련하여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눈에 띄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8월 14일 SNS 및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관련된 입법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전체적인 입법 및 정책 동향은 본문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I. 위클리 포커스 **바로가기**

- Focus 1.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발표
- Focus 2.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 Focus 3.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

II. [국회] 입법 동향 **바로가기**

-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 관련 법안
-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법안
- 온라인 플랫폼·앱마켓 관련 법안
- 소액주주·기업지배구조·이사의 의무·법인세 관련 법안
- 근로기준·중대재해·온열질환 예방 관련 법안
- 청소년 SNS 중독 예방 관련 법안
- 자동차·모빌리티(PM) 관련 법안
- 벤처 투자 관련 법안
-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안
- 담배사업 규제 관련 법안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관련 법안

III. [정부부처] 정책 및 입법 동향 **바로가기**

- 사업장 대기총량제 개선 -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혁신도시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확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시행

Focus 1.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발표

- 금융위원회는 2024년 8월 13일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급변하는 클라우드, AI 등 IT 환경에서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2013년 도입된 망분리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단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금융보안법 (가칭)」을 제정하여 자율보안·결과책임 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로드맵 주요 내용

1단계 추진과제

<p>생성형 AI 활용 허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회사가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허용 • 망분리 특례를 통해 금융회사 정보처리시스템(내부)과 AI 모델(외부)간 연결 허용 • 해외소재 AI를 통한 가명정보 처리를 위한 관련 법령(전자금융감독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개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 추진 • 신청 기업별 AI 사용 목적, 처리 데이터 범위, 보안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 샌드박스 심사·지정을 진행
<p>클라우드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SaaS) 활용도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직원 업무망에서의 SaaS 활용 범위 대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범위: 개인신용정보 불가 →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 허용 - 프로그램 유형: 협업도구, ERP 등만 허용 → 보안, 고객관리, 업무자동화 등 추가 허용 - 단말기 유형: 유선 PC만 허용 → 모바일 단말기도 허용 • SaaS 이용 절차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연속성 계획 필수사항: 21개 → 18개 - 안전성 확보조치 필수사항: 47개 → 33개 • 전자금융거래와 무관하고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SaaS의 경우 “위수탁계약 주요 기재사항” 차등화
<p>연구·개발 분야 망분리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망과 업무망간 논리적 망분리를 허용하고, 소스코드 등 연구·개발 결과물의 망간 이동 편의를 확대 •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 활용을 허용하여 고객 행동 특성 등 데이터 분석 기반의 혁신적인 금융상품 개발 환경 제공 • 연구·개발망을 통한 IT개발자 등의 재택근무를 가능하도록 함

2단계 추진과제

<p>기존 규제 특례의 정규 제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단계 규제 특례에 대해 충분한 성과검증을 거쳐 2025년 말까지 정규 제도화 생성형 AI 및 임직원 업무망에서의 SaaS 관련 규제특례의 경우 효용성 평가와 보안 검증을 거쳐 상시 제도화
<p>개인신용정보 처리 허용 등 규제 특례 고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단계 과제에 대한 충분한 성과검증과 보안평가 등을 거친 후, 추가 보안대책을 전제로 실제 개인신용정보 처리까지 허용 실데이터 기반의 금융상품 개발 및 고객관계관리(CRM) 고도화
<p>제3자 리스크 관리 강화 등 정보처리 위탁 제도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등 금융권의 제3자에 대한 정보처리 위탁이 증가함에 따라 제3자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도를 정비 EU·영국 등 해외 선진사례 연구를 토대로, 국내 환경에 맞는 도입 방향 검토

3단계 추진과제

<p>새로운 금융보안체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도의 금융보안법(가칭 “디지털 금융보안법”)을 마련하여 “자율보안-결과책임” 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금융보안체계를 구축 열거식 행위규칙(Rule) 중심의 금융보안규제를 목표·원칙(Principle) 중심으로 전환하고, 금융회사 등은 자체 리스크 평가를 바탕으로 세부 보안통제를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 중요 보안사항의 CEO·이사회 보고의무 등 금융회사 내부 보안 거버넌스 강화 전산사고 발생시 배상책임 확대 및 실효성 있는 과징금 도입
----------------------	---

관련자료

[보도자료]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발표 [바로가기](#)

Focus 2.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8월 14일부터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

-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고를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에 피해내용, 원인, 대응현황 등을 우선 신고(최초신고)하고, 추가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보완신고를 하도록 함

- 침해사고 발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재발방지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기존의 '권고'에서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에 따라 과기부가 해당 명령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및 침해사고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관련자료

[보도자료]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바로가기](#)

Focus 3.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는 2024년 8월 13일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지역·기업 활력을 도모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으로, 2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신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소규모주택 지방세 감면 확대, 내진보강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8월 14일부터 26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후, 10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

-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기존 3자녀 이상 가구만 100% 감면)
-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이 신설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
-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최초로 구입 시 취득세 감면(100%) 한도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 지진피해 예방과 건축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의 내진 보강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 사업장 인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유동성 위기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 인수하는 경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
- 그 외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소상공인 지원,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등 다양한 지방세제 개선

관련자료

[보도자료]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발표

[바로가기](#)

① 신규발의 법률안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 관련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2202614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의 소유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 탐지설비 및 화재알림설비, 소화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4인) 2202624 / 소관위원회 정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건물 등의 옥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소화수조·방화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옥내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3인) 220262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옥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화셔터, 소화수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2202740 / 국토교통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차 제조사들이 배터리 제조사를 차량 제원 안내에 포함하도록 의무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3인) 2202804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에 우선 설치되도록 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압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형 참사로의 확대를 방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3인) 2202806 / 국토교통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안전 설비를 갖추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화벽, 전용 스프링클러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설비 - 화재진압용 노즐, 소화수조, 질식소화 덮개 등 소화용수설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5인) 2202807 / 국토교통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 등록원부에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주요 정보(제조사, 제조일, 구성물질, 전압, 용량 등)를 기재하도록 함 전기자동차 제작자 등은 구동축전지의 전류, 전압, 온도 등 이상 상황의 발생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도록 의무화 구동축전지의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전기자동차 제작자 등은 전기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즉시 검사를 받도록 함 전기자동차 소유자가 즉시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전기자동차 제작자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를 위해 소방당국의 협조를 받아 해당 전기자동차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함

법률안	주요 내용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4인) 2202857 / 국토교통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 설치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대하여 방화 셔터를 포함한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의원 등 13인) 2202895 / 국토교통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등록원부에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제조사를 명확하게 등록하도록 의무화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1인) 2202620 / 정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판매중개자의 정산 주기를 구매를 확정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로 하고, 지연 시 공정위가 정한 이율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함 • 판매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를 통하여 별도 관리 하여 통신판매 중개자가 판매 대금을 임의대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규제 •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판매 대금 관리에 대한 규제를 강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3인) 2202622 / 정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산대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여 이커머스 중개업체가 정산대금을 임의대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의 제재 • 통신판매중개업체(이커머스)의 대금지급 의무기한을 새롭게 규정하여, 중소기업자들의 권익을 보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의원 등 14인) 2202667 / 정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사이버몰 운영사업자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의무기한을 규정하고, 대금지급 의무기한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35인) 2202678 / 정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평균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인 대형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허가 전자금융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감독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부여 • 구체적으로, 경영지도기준 미달 시 자본증액과 이익배당 제한 명령, 임원개선 명령, 영업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의원 등 12인) 2202746 / 정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판매중개자는 소비자가 재화등의 구매를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함 • 통신판매중개자는 판매된 재화등의 대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은행에 예치·신탁하도록 함 • 관리기관은 대통령령에 따른 안전한 방법으로 대금을 관리하도록 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의원 등 13인) 2202849 / 정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판매중개자의 거래정산금 지급기한을 소비자가 해당 상품의 구매를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정함 • 또한 거래정산금을 은행에 예치·신탁하거나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미정산 피해를 방지

온라인 플랫폼·앱마켓 관련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김우영의원 등 25인) 2202663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콘텐츠 제공 시 정보통신망 이용·제공에 관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부과, 계약 체결의 부당한 지연·거부 등의 행위를 제재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망 사용 추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망 이용계약의 투명성을 확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2202594 / 정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중개서비스업자, 이용사업자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법 적용 대상을 매출액 또는 중개거래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로 정함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부여하고, 검색·배열순위 결정 기본원칙을 공개하도록 함 부당한 이용사업자 차별, 특정 결제방식 강제, 서비스 제한·중단·거절 행위, 14일 이내 정산대금 미지급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2202709 / 정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이용사업자와 계약 체결 시 중개거래계약을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공정위는 표준계약을 마련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0일 전까지, 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하려는 경우 7일 전까지 이용사업자에게 통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소비자의 구매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용사업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함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현의원 등 18인) 2202843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앱마켓사업자가 자기 앱마켓 외부에서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다른 결제방식을 허용하도록 하여 이용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결제방식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함

소액주주·기업지배구조·이사의 의무·법인세 관련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2인) 2202556 / 정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입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을 제한하여 공매도를 통한 차익 취득 행위를 제한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대차계약에 대해 상환기간 제한을 적용하고, 대차중개기관이 이를 구분 관리하도록 함 차입공매도를 하는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조치를 의무화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행위, 무차입 공매도 등에 대한 계좌 자산 처분 금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의 조치를 도입 무차입 공매도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법률안	주요 내용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7인) 2202571 / 법제사법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에게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부여 •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만으로 결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이사에게 면책을 줌으로써 소수주주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차규근의원 등 30인) 2202706 / 법제사법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주는 다른 주주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부당하게 다른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여 • 주주총회 통지 기한을 현행 2주 전에서 4주 전으로 확대하고,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3주 전까지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함 • 이사의 보수에 관해 주총에서 구체적 산정근거를 설명하고 주주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부당한 평가에 기초한 보수를 환수해야 할 의무를 명시 •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1만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도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2인 이상의 이사 선임 시 소수주주권으로 집중투표를 청구할 경우, 정관으로도 이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함 •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합산 3% 초과 지분에 관해 의결권을 제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1인) 2202847 / 법제사법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함 • 회사의 합병 등에 있어 불공정한 합병비율 등으로 주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주주가 이사에게 합병의 유지를 청구 가능
집단소송법안(백혜련의원 등 10인) 2202896 / 법제사법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은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고,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며, 구성원의 수가 50명 이상일 때 집단소송으로 해결할 것을 허가하도록 함 • 집단소송 대리인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며, 법원은 사건의 공익성 및 대소, 대표당사자의 자력 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을 감면 가능 • 구성원은 제외신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제외신고를 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개별소송을 제기한 자는 제외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 • 법원은 증거조사에 의해서도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표본적·평균적·통계적 방법 등 합리적 방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2202639 / 기획재정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 •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2%로 하향 조정

근로기준·중대재해·온열질환 예방 관련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6인) 2220652 / 환경노동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노동부가 요청하는 업무상 사망사고에 국한된 사고조사 대상을 중상해재해까지 확대하고, 재해조사 결과를 동종·유사 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해 발생의 기술적, 과학적 원인 중심의 분석 결과와 예방대책을 중심으로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 중대재해 원인조사 시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전문가의 재해조사 참여 근거를 마련하고, 참여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 근로감독관이 재해조사 시 공단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재해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2220850 / 국토교통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류센터는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되어 열원설비, 냉난방설비, 공기조화 설비 등의 설치 의무에서 벗어나고, 이로 인해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분진과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 이에 물류센터를 건축법상 창고시설에서 별도의 생활물류시설로 구분하여 물류센터 내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환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3인) 2220859 / 환경노동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에 폭염, 혹한 및 다습 등의 기상여건이나 고열작업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명시하여, 이를 통해 폭염·한파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1인) 2220869 / 환경노동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법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개정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둠 또한,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영세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0인) 2220875 / 환경노동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법 상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에게도 부여하여 이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청소년 SNS 중독 예방 관련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7인) 222063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칙적으로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사회관계망서비스 내에서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정보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정보추천 알고리즘)을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친권자 등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허용 자정부터 오전 6시 이전 사이의 시간대에 대해서는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허용함에 있어 보호자의 추가적인 동의가 필요하도록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222076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SNS 일별 이용 한도 설정에 대해 반드시 친권자 등의 확인을 받도록 함 중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허용 여부에 대해 반드시 친권자 등의 확인을 받도록 함

자동차·모빌리티(PM) 관련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의원 등 10인) 2202673 / 국토교통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낮추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2202677 / 국토교통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법상 정부보장사업의 보장범위가 동차 운행으로 인한 생명·신체 손해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까지 확대 무보험사고의 경우, 경찰에 신고된 모든 사고에 대해 재산상 손해도 보상하도록 하고, 뺑소니·낙하물 사고의 경우, 대인손해를 동반한 사고에 한해 재산상 손해도 보상하도록 함

벤처 투자 관련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의원 등 10인) 2202583 / 정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CVC가 투자조합을 결성할 때 지주회사 체제 외부자금 유치 한도를 현행 40%에서 최대 50%까지 늘리고, CVC의 총자산 중 해외투자 금액 비중을 현행 20%에서 30%까지 상향 조정 SOC 등 투자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신고의무를 면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의원 등 14인) 2202885 / 정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에 집중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할 수 있도록 함.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해야 하며, 최소 5년 이상의 존속기간을 가진 환매금지형으로 설정·설립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인가 요건을 완화하여 투자 진입을 원활하게 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할 때는 일반적인 자산운용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되, 별도 규정 적용 벤처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금전대여를 허용하여 원활한 자금공급을 도모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2인) 2202889 / 정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고, 연장 시 최장 6년까지 혁신금융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220289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시허가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최초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확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하여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연장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2인) 220289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 이하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3년 이하로 확대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추가 연장 가능

담배사업 규제 관련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2202872 / 기획재정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나 뿌리, 또는 천연니코틴이 아닌 합성니코틴을 사용하여 제작하는 유사담배는 담배만큼 중독성이 있고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따른 각종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담배의 원료를 연초의 전부 또는 니코틴 전체로 확대하여 정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2202898 / 기획재정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니코틴으로 만든 담배에 대하여도 규제가 가능하도록 담배의 정의를 수정하여, 이를 통해 합성니코틴을 이용한 전자담배도 개별소비세 부과 및 경고그림·문구 표기 등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관련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8인) 2202546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평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중소기업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평일 의무휴업으로 인해 공휴일에 근무해야 하는 대형마트 등의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

I. 위클리 포커스

II. [국회] 입법 동향

III. [정부부처] 정책 및 입법 동향

시행령·시행규칙 의결 및 입법예고

사업장 대기총량제 개선 -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바로가기](#)

환경부 / 2024-08-06

대상 법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일자	2024-08-17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출허용총량 차입제도: 총량관리 사업자가 할당기간(5년) 내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 일부를 미리 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차입 가능 범위는 해당 연도에 할당받은 할당량의 10% 이내로 규정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 동일한 대기권역 내 다른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활동도 감축량으로 인정(현재는 연료전환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 시행 전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의 인정을 받아야 함) 추가할당 및 할당 취소: 사업장 신·증설 등에 따른 추가할당의 근거, 사업장 폐쇄 또는 거짓·부정하게 받은 할당량에 대한 할당 취소의 근거 등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마련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혁신도시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 2024-08-06

대상 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혁신도시 조성 특별법 시행령
시행 일자	2024-08-21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시 기존의 '예비인가' 절차가 폐지 국토교통부는 추가적으로 「리츠(REITs)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프로젝트 리츠·지역상생리츠 도입 및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양도가격 제한 완화.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에 건축물을 준공하고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7년이 지난 경우, 양도가격 제한을 받지 않고 주변시세로 매도 가능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확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바로가기](#)

중소벤처기업부 / 2024-08-13

대상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일자	2024-08-21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중소기업이 매출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5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되어 각종 지원 혜택 연장 가능 중소기업이 졸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도 합병기업이 승계하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다만, 대기업 계열사 등에 포함되어 중소기업을 벗어나는 경우는 여전히 유예기간 없이 중소기업에서 배제되며,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후 다시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재차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중소기업 유예 대상에서 제외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시행 [바로가기](#)

공정거래위원회 / 2024-08-06

대상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규칙 기업결합 신고요령
시행 일자	2024-08-07
주요 내용	<p>시정방안 제출제도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를 통해 기업은 경쟁제한 우려에 대한 시정방안을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되며, 공정위는 이를 고려하여 시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음 기업이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심사보고서에 동의하면 의결절차가 신속화(fast-track)되는 혜택 부여 <p>기업결합 신고 면제 범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PEF(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상법상 모자회사 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임원 겸임, 소규모 계열사 간 합병, 그리고 소액의 영업 양도 등이 신고 면제 대상에 포함 <p>모든 기업결합 신고 온라인으로 의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잡한 기업결합의 경우 주요 쟁점 및 산업구조 등에 대한 사전협의를 가능하도록 신고 절차를 개선

입법지원팀

기업의 규제환경이 복잡하게 변화함에 따라 규제 및 입법에 대한 기업의 적절한 대응이 보다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율촌의 입법지원팀은 이러한 기업의 규제 및 입법 대응을 위한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현행 법령 및 행정규칙, 지자체의 조례, 관계부처별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등에 존재하는 다양한 규제에 대한 해석과 제개정, 사안별 적용 여부 분석과 함께 개별 부처 또는 유권해석 기관 응대를 통한 규제 대응 방안, 국회 국정감사등에서의 리스크 관리를 제안해 드립니다.

또한 상시적인 입법·정책·규제 모니터링을 통하여 고객별 산업별 동향을 파악하여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가 생성되지 않도록 전문 입법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율촌의 입법지원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의 고위 관료 출신 변호사와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규제 및 입법 대응 전문팀으로, 풍부한 네트워크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별 최적의 대응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변호사



이강민 변호사



박지웅 변호사



장재형 사무사



구기성 고문



김동석 수석 전문위원



최준영 수석 전문위원



윤여훈 전문위원